

근대적 전환기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에 대한 한국의 인지적 대응: 국권 인식을 중심으로

전상숙*

요 약

아편전쟁 이후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강화도사건을 일으켜 서양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개국시키고 대륙팽창 의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중화질서를 전복시키고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편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주창한 ‘아시아연대’론은 서양 열강에 대한 근대 국가 일본의 국권 확립과 팽창을 위한 패권의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나 거기에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호응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근대적 개혁기 국권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일본의 그것은 서양 근대에 대한 대자적 인식 속에서 자주적 주체적으로 근대 동양 국가의 주권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반면 한국의 그것은 서양에 대한 즉자적인 인식 속에서 종래와 같은 국가 주권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근대적 국권 인식이 미숙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권이 상실된 가운데 저항적 민족의식과 근대 국권 인식을 체험적으로 각성해가며 국가적 독립을 선회해야 하게 되었다.

주제어: 아시아연대, 동아동문화, 주권, 흥아회, 김홍집, 수신사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선임연구원, sjeon16@hanmail.net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머리말

각 국가의 영토와 이념적 경계가 뚜렷해지고 국가 주권 곧 국권의 개념이 국제관계의 기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베스트팔렌조약을 통해서였다. 서유럽의 종교전쟁을 마감한 베스트팔렌조약은 왕에게 특정한 영역 내의 최고의 배타적인 권력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 세력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 특정한 다른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국가 주권 개념은 국가가 통일적 주체성을 갖는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 주권은 대내적인 최고성과 대외적인 독립성을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 주권은 근대의 정치적 측면을 규정하는 기본 개념의 하나이다(Onuf 1991, 426). 주지하듯이 국가 주권의 문제는 절대주의 군주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관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일체의 외부적 간섭을 원리상 배격하는 민족주의 관념과 연결되어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근대 이후 분명한 모습을 갖게 된 국가 주권 개념은 단순한 정치적 사실에 대한 기술을 넘어서서 규범적 또는 윤리적으로까지 고양된 특성을 갖는다. 수많은 전쟁을 겪는 동안 최소한 강대국 사이에서는 혼자 힘만으로는 어떤 특정 국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중소 국가의 경우에도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서유럽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근대 국가 및 국제질서와 관련된 정치, 그리고 그에 수반된 이론적 논쟁이 국가 주권 문제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박상섭 2004, 95-97).

이러한 국가 주권 개념이 동아시아에 전해진 것은 동진(東進)한 서양 열강과 동아시아 각국이 타율적으로 조우하면서였다. 선진 근대 기술로 무장한 서양 제국(諸國)은 함포와 함께 국제법이라는 무기를 거느리고 동양의 ‘비문명’ 제국에게 개국(開國)을 강요하였다. 동양 각국은 “최후의 승리에 대한 일체의 희망이 사라진 뒤에도 오래 계속될 가능성이 많은 투쟁을 전개

하고서야 유럽의 우세한 힘에 굴복하였다”(山口光 1962, 76). 동양 각국의 개국은 서양 근대 국가들 간의 국제질서를 규정한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가 주권이 존중된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당’하게 전근대적인 동양을 ‘근대 문명’의 국제법체제로 편입시켰다.

개국케 한 서양 근대의 위력은 동양 제국이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근대화를 모색하게 하였다. 중국의 아편전쟁 패배를 직접적인 계기로 한 동양의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개국할 수밖에 없었던 서양 근대의 힘을 습득하여 국가 주권을 보존하고 서양과 같이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호를 개방하게 한 기본 규범이 된 서양의 국제법과 국제법체제, 그리고 그 주체인 근대 국가 특히 국가체제와 정치체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서양 근대의 힘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근대적 개혁의 상징이자 근대화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서양 근대 국민국가체제를 견인한 것은 과학의 발달에 힘입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부르즈와지였지만, 동양 각국이 대면한 것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서양 근대 국가였고 정치체제였다. 그러므로 동양 각국에서는 개국과 함께 근대적인 국가·정치체제 개혁 논의가 분분했고, 그 방법과 대외관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이견과 갈등이 야기되었다(전상숙 외 2013, 88-89).

서양 국가들이 인근 다른 정치조직자들과의 무력경쟁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성장한 반면에 동양 국가들은 서양에 의한 문호 개방 이후 근대적인 체제 개혁과 함께 근대 국가로의 성장을 시작하였다. 이 때 국가 주권의 문제는 개국을 강제한 서양 근대 국가들로부터의 독립이 전제된 것이었다. 직면한 국권 수호 문제는 대외적인 독립의 불안정을 야기한 서양의 힘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과 서양과 같은 힘을 갖기 위한 근대적 개혁의 필요와 맞물렸다. 그리고 개국의 변혁 상황에서 동양 각국의 주권 문제는 서양에 대항할 수 있는 근대적인 개혁과 그 개혁을 추진할 주체 문제와 직결되었다. 그러므로 동양 국가들에서 근대적인 국권 확립의 문제는 서양과는 역으로 대외적인 독립 확보를 위하여 대내적인 최고성을 다투는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개국 이후 서양 제국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된 동양 각국의 근대적 개혁은 독립을 위한 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아편전쟁 패배로 위기에 처한 중화질서가 근대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일본에 의해서 변혁, 개편되었다. 주지하듯이 일본은 중국의 패배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강화도사건을 일으켜서 서양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개국시키며 대륙팽창의 의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중화질서를 전복시키고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편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아시아연대’ 곧 ‘아시아주의’를 주창하였다. 그것은 서양에 대한 아시아,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의 발전을 강조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을 주창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서양 열강에 대한 근대 일본 국가의 국권 확립과 팽창을 위한 패권의 정치적 수사였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적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호응하기도 하였다. 이 사실은 근대적 변혁기 일본과 한국 간의 근대적 국권 인식 정립과정 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주의는 “구미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하여, 아시아 제민족은 일본은 맹주로 해서 단결하라고 하는 주장”을 말한다. 아시아 국가들 연대를 주창하는 것이 최소한의 아시아주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野原四郎 1959-1962; 竹内好 1963, 8-10). 그러한 아시아연대론은 일본의 독립문제와 관련해서 메이지 초년부터 제창된 것이었다. 그것은 서양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시아 제민족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때 일본은 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먼저 근대화되었으므로 동아시아에 원조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 이는 일본 민족의 사명이라고 내외에 강조하였다. 그 실상은 국가적 위기를 느낀 일본이 자발적인 문호 개방 이후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고 열강과 같은 근대 국가, 열강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국권’확립의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한 것이었다. 서

양 열강과 맞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힘의 약세를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아시아 제민족의 연대·연합을 통해서 확충하고 근대 일본 국가의 국권을 확립·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이러한 아시아주의는 메이지 20년대에 이르러 민권론자의 아시아연대론 으로부터 자유민권운동의 후퇴, 천황제국가기구의 확립, 대청(對靑) 군비의 확장 등과 함께 대아시아주의로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열강에 맞서기에 역부족한 힘을 확충하기 위한 아시아 제민족의 연대, 아시아주의는 일본 정부의 대륙침략정책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유민권론자들의 주장 가운데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었지만 일본사회에 특히 유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다루이도기치(樽井藤吉)와 오오이겐타로(大井憲太郎)의 주장이었다. 아시아주의는 서구에 대한 도전의 논리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의 독립과 패권의 논리였다. 이 점에서 일본 정부와 민간 사회는 비록 현실의 외교적 입장의 차이를 표출하기는 했어도 총체적으로 그 지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국가적인 발전 방략의 모색이 국가와 민간사회 양 측면에서 모두 서양과의 차이와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구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전상숙 2010, 14-15). 그러므로 종래 아시아주의, 대아시아주의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다루이와 오오이의 주장을 중심으로 일본이 어떻게 동양의 맹주론을 전개했는지 논의하였다. 이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광린 1986; 김도형 1991; 조재곤 2000; 김도형 2000; 백동현 2001; 竹內好 1963; 清水元 1993; 水野直樹 1996; 山室信一 2001; 김경일 2011; Sven Saaler 2007).

그러나 이 글은 일본에서 서세동점의 시기에 일본 맹주의 아시아의 연대·대동아공영권으로 전개된 아시아주의가, 서세동점으로 국가적 위기를 느낀 일본이 열강과 같은 근대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열강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국권’확립의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시아주의는 일본사회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서양과의 차이와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구하며, 국가적인 발전 방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확장해 갔다. 주지하듯이,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서양 열강과 필적할만한 근대 국가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근대적인 국가체제 곧 근대적 국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아시아주의는 바로 근대적 국권 확립의 방향을 모색, 확립해 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서양 열강과 필적할 만한 근대적인 국권을 확립하고 열강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밀한 인구와 부족한 자원이라는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국가적 발전을 담보할 대륙, 만도 한국으로의 진출이 불가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주의, 아시아연대론은 한국과 관련해서 정한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연대론은 한국에서, 서세동점의 위기에 직면해 근대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치룬 같은 동양의 국가 일본이 솔선해서, 공동으로 직면한 서양 국가들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1880년 3월 동경에서 일본인들이 설립한 홍아회에 동년 8월 수신사 김홍집 일행 참석한 이래 일진회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아시아 제국과의 연대 의식, 연대론은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러일전쟁을 거치며 서양에 대한 동양 삼국의 단결 의식 고조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일본의 한국 지배 구상 역시 구체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한국 지식인들이 동양 삼국의 연대나 균열을 주장함으로써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이 주창했던 동양평화론, 아시아연대론은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아시아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했던 아시아연대론을 통해서 근대적 전환기 한국 초기의 국권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곧 아시아주의에 내포된 일본 국권 확립의 주창과 대비하여 아시아연대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의 주권, 국권이란 것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이후 양국이 전지구적인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분기되는 중요한 요인과 근대적 변환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숙고하여

반추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근대적 전환으로부터 한·일 양국이 지배와 피지배의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는 역사적 관계 속에서 아시아연대론을 고찰하여 그로부터 대동아공영으로 이어진 일본의 침략적 패권 의식의 역사적 뿌리와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 현재의 역사 인식과 문제를 반추해 보고자 한다. 이는 탈냉전 이후 제기된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제고하는 의미도 갖는다. 그것은 19세기 후반 동진하는 서양 세력에 대항한 ‘아시아연대’라는 미명하에 등장하여 1930년대 이후 ‘동아 협동체’, ‘대동아공영권’으로 전개된 이른바 ‘동아신질서체제’를 구축했던 역사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역사 속에 일본의 식민지 한국과 반식민지화되었던 중국의 역사적 경험이 중첩되어 있다. 이 역사적 경험은 현재 동아시아 삼국 간에 영토문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통칭 ‘역사문제’의 근원으로써 해소되지 않은 채 엄존한다. 그러므로 국제화시대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지역주의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 또한 역사적인 제고를 통하여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찰하는 의미도 갖는다.

II. 일본의 아시아연대론과 국가 주권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한 것은 동아시아 삼국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런데 특히 일본에게 중국의 패전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쇄국을 고수하던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미 도쿠가와 시대부터 나가사키를 통해서 대량의 한문 서적이 수입되었다. 이를 통해서 난학자(蘭學者)들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어 서적 중에서 화이(華夷)의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상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적에서 보이는 ‘China’라는 말을 한자로 ‘지나(支那)’라고 표기하였다. 이 말은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우월성을 제거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전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가운데서 화이관념에서 벗어나 ‘황국(皇國)’일

본의 우월성이라는 발상이 발아하였다. 에도시대 일본은 경제적 자급을 달성해가면서 관념상으로도 자국 중심의 발상을 취하고 있었다(渡邊浩 1997, 148-183; 요시자와 2006, 70; 전상숙 2012b, 185-186).

막말이래 일본의 지배층은 긴장관계에 있던 서양으로부터 민족으로서의 자립의 원리를 모색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문명’의 원리를 모색하며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沖田行司 2007, 96). 압도적인 ‘힘’을 가진 서양 제국에 의해서 강제된 불평등조약은 일본 국가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또한 아편전쟁은 일본이 서양과 대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서양과 같은 문명을 지향하면서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중주국 중국보다 월등한 일본을 건설한다는 사상적 긴장이 형성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양 문물의 수용은 다른 문화를 수용할 때의 주체성의 근거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상과제를 낳았다. 이러한 자주적인 국가적 문제의식은 서양사상의 ‘응용’과 ‘실천’을 통해서 실질적인 일본적 문명화로 연계되었다. 그러한 사상의 응용과 실천의 노력은 이를 위한 국가적 체제 개편으로 연계되었다(沖田行司 2007, 65-66). 서양 문물의 수용을 통해서 일본은 재래의 한학(漢學)과 국학(國學)에 기초한 세계관을 일대 전환시켜간 것이다(武藤秀太郎 2009, 7). 그 결과 부국강병론으로부터 막부말기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를 상대화하며 외압에 대항하는 보다 강력한 통일 국가를 창출하기 위한 국권론적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전상숙 2012b, 187).

마루야마(丸山眞男)는 일본의 ‘개국(開國)’을 서양적 국제사회에 일본을 개방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자신을 하나의 통일된 독립 국가로 마무리 짓고 선을 긋는 양면성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丸山眞男 1961, 9-10). 열강의 위력에 압도당한 개국은 일본에게 평등한 대외적 주권 곧 대외적 독립과 평등성을 갖는 근대적 국가 주권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가적 위기 의식과 과제를 낳았다. 그 과제는 일본이 서양과 같은 근대화·문명화를 이루어 서양 열강과 대등한 대외적 주권을 인정받고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완수될 것이었다. 근대 일본의 기원이라 불리는 메이지유신의 기획은 근대화를 ‘개국’의 방향으로 잡고 국제법 개념을 전폭 도입해 질서화한 것이었다(一又正雄 1973; 井上勳 1980, 2; 이한기 1980, 188-199). 강력한 통일 국가를 창출해 대내적인 최고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존중되는 국권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곧 마루야마가 적시한 국권 확립의 개국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 국가가 자주적으로 근대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직결되어 서양 근대 문명의 지적 기반이 되는 국제법을 필두로 한 서양 문물을 선별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선택적으로 채용된 서양 근대 학문은 서양적 근대 문명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중시되었다. 그리하여 메이지 국가 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수립과 함께 제도화되어 관학을 통해서 교육되었다. 통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하여 존황양이(尊皇攘夷) 운동의 지사로 출발한 메이지 관료들은 일본의 상황과 유사한 프러시아의 국법학과 국가학을 선별적으로 채용하여 메이지천황제로 정립하였다(松本三之介 1969, 65-67). 이러한 국가적 변혁의 다른 한편에서 사회적으로 다른 문화를 수용할 때의 주체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같이 서양 중심 국제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강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일본 국가가 당면한 대외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재생산되었다(전복희 1996, 18-28; 하영선 2009, 217). 이와 같이 개국 이후 국가와 사회 양 측면에서 진행된 경향은 일본 근대 국가의 대외적 독립의 확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근대 국가의 주권 확립을 지향한 것으로써 근대 일본 국가체제 정립과정에 수렴되었다.

이러한 막말 메이지 초기의 환경 속에서 1880년 흥아(興亞), 동종동문(同種同文), 순치보거(唇齒輔車) 등을 주장하며 ‘아시아연대’를 제창하는 결사체가 등장하였다. 사회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시아를 일으키는 모

임이라고 명명한 흥아회(興亞會)였다(山本茂樹 2001, 88). 흥아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대부분 정부 관리나 군인, 언론인 등 실질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다. 흥아회는 한때 천황의 하사금을 받아서 운영되기도 하였다(酒田正敏 1978, 61-65). 이 사실은 흥아회가 관변 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적 정책의 방향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891년 서세동점과 일본의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며 “일본 제국(帝國)”이 “인접 국가의 정세를 파악하여 세력을 외부에 펼쳐야한다”고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동방협회(東邦協會)가 결성되었다(安國昭男 1998, 220-221). 동방협회는 서양에 의해서 중국이 반식민지화되는 약육강식의 국제정치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서 중국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동방협회는 제국(帝國) 일본의 국가적 독립의 강화와 이를 위한 중국과 한국에 대한 강한 지도의식을 드러내며 이를 위한 단체의 정치화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일본은 중국의 정세변화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중국은 일본이 한국과 같이 사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화질서 속에서 교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동양의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한 중국의 서양 열강에 대한 패배를 일본은 자국에 투사하여 경험적으로 서양 근대의 힘을 자각하였다. 서양 열강의 힘에 의하여 개국된 중국은 일본이 서양과 같은 근대적 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며 서양 국가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식을 모색하는 선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또한 서양 근대 국가에 패함으로써 무기력함을 드러낸 중국은 섬나라 일본이 서양과 같은 부국강병을 이루어 국권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자원과 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린 지역이기도 하였다. 중국 연구를 표방한 단체들이 세력을 외부에 펼칠 것을 주장한 것은 궁극적으로 대륙진출을 지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흥아’와 ‘동방’이 주창되었고 제국주의적 이권 침탈을 하는 백인종 기독교 문명 서양에 대항하는 황인종 유교문화의 동질성과 이와 입술 같은 운명공동체 동양 삼국이 역설된 것이다.

동방협회가 출현한 1890년대는 일본이 메이지헌법을 발포하고 제국의회

를 개설하는 등 근대적인 정치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이익과 국력의 관점에서 근대 일본 국가의 발전을 대외적으로 적극 피하기 시작하던 때였다(전상숙 2012c, 20-23). 1890년 일본 근대 육군을 창설한 초대 수상 아미가타(山縣有朋)가 외교와 군사 문제에 대해 발표한 의견서가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그것은 ‘국가 독립 자위의 길’은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山縣有朋 1890). 일본 영토인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익선, 곧 자국 영토의 ‘안위와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는’ 인근 지역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익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접 국가를 국익에 필수적인 범위로 설정해 국방의 범주를 확장한 것이었다. 그러한 이익선론은 제국 의회에서 국책(國策)으로 결정되었다(山縣有朋 1890). 이후 1893년 군비의견서(軍備意見書)에서는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될 때 본격적으로 행해질 러시아 등 서양의 동양 침략에 대한 준비가 결의되었다(山縣有朋 1893).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93년 다루이의 『대동합방론』이 간행되었다(樽井藤吉 1893). 이 책은 세간에서 논의되던 일본의 동양 맹주론과 동양 삼국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순치보거(唇齒輔車)와 같은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동아시아 삼국이 한·일 간의 “합방(合邦)”과 일·중 간의 “합종(合縱)”을 통해서 서양, 러시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樽井藤吉 1983, 108-128). 자유민권파로 알려진 다루이의 주장은,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키고 반도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아시아의 패권을 다투던 일본의 대청 주전론(主戰論)에 대해서 진화론과 인종론에 입각하여 비전론(非戰論)적인 동양 패권을 논한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황인종이 패권을 장악하는 세계전략 구상을 제시한 것이었다(김정일 2011, 69). 물론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다. 전쟁에 대신해서 합방과 합종을 말함으로써 비전론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일본의 입장일 뿐이었다.

동아시아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인식은 청일전쟁 이후 유일한 비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되자 일층 강해졌다. 청일전쟁과 일본의 제국주

의화에 무비판적이었던 다루이의 태도는 일본 사회의 대동합방론이 말하는 비전론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대동합방론은 주전·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일본의 동양 맹주론을 주창한 것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표출된 그것은 더 이상 서양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대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고양되었다. 그리하여 영·미협조주의 외교관계 속에서 대륙정책을 조율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주적, 적극적인 대륙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군부와 사회 일각에서 점증하였다. 일본이 술선해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어 동양의 단결을 위한 아시아연대를 이끌어 서양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저변에는 서양에 비해서 열세인 일본이 아시아연대를 통해서 힘을 보강해 대응한다는(矢澤康祐 1960, 2)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있었다. 중국의 반식민지 상황을 이용하여 서양 열강과 같은 제국의 일원이 된 일본이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동아시아의 지도국이 되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대륙진출의 초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요구가 정치사회적으로 고조된 것이었다.

아시아연대론은 그러한 근대 일본 국가의 동아시아 맹주론을 뒷받침하는 정치사회적인 명분에 다름 아니었다. 아시아연대의 주창은 흥아회가 결성된 이래 계속된 것이었지만 1898년 흥아회가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로 조직적으로 확대 병합되면서 일신되었다(전상숙 2012c, 23). 1896년에 진보계열 정치가와 일본신문사 일부 인사들이 결성한 동아회(東亞會), 그리고 중국 대륙의 낭인들과 일청(日淸)무역연구소 졸업생인 고노에 아쓰마로 등이 결성한 동문회(同文會), 1898년에 결성된 도쿄대학의 동명회(同明會)와 와세다대학의 동인회(同人會), 그리고 동방협회가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로 합병되었다. 동아동문회는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여기고 당면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여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이 “지나(支羅)를 보전”하고 “지나와 조선의 개선(改善)”을 이끌어야 한다는 강한 지도의식을

가진 것이었다. 중국의 시사(時事)를 연구, 검토, 실행하여 “국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을 확충시킬 것을 강조하였다(東亞文化研究所 1988, 32). 이는 서양의 아시아 침략과 러시아의 남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에서 찾아 일본 중심의 지역적 연대를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다고(김경일 2011, 69) 할 수 있으나 그 실상은 패권의 논리이자 패권을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

이렇게 청일전쟁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서양에 대한 동양이라는 이분법적인 대결구도를 조성하며 동양에 대한 강한 지도의식이 단체의 결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정치화되기 시작하였다. 승전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과 승전국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국가들로부터 당해야 했던 삼국간섭이라는 굴욕이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다(전상숙 2012c, 23-24). 그리하여 영미협조주의 외교 방식을 비판하는 급진적인 일본 중심주의가 사회적으로 표출되었다. 근대 일본의 국권은 서양 열강과 견줄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전까지는 확립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삼국간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연대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단적인 사회적 움직임과 영미협조주의 외교를 고수하는 정부는 당면한 실천방법 상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을 뿐 근대 일본 국가의 성장과 이를 위한 동아시아 맹주론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아동문회에 유력한 정치가·군인·관료 다수가 참가했을 정도로 아시아연대와 이를 위한 정치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활동으로 연계되며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Saaler 2008, 137-139). 이러한 흐름이 현양사(顯洋社)나 민권파(民權派)의 흐름, 흑룡회(黑龍會) 등과 이합집산하며 이른바 ‘아시아주의’의 기초를 형성해 갔다. 아시아주의는 일본이 아시아의 일국으로써 서양의 아시아 진출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각성’과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을 맹주로 아시아가 그 역사적 유산을 자각하여 서양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혼미에서 벗어나 힘차게 세계 문

명에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메이지정부가 개국하며 서양 국가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 등 성과를 거둘수록 아시아주의적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증가하고 정부의 영·미협조주의에 대한 비판이 커갔다(Irie 1993, 42-56).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아시아연대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의 근대화에 협조적이었던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에서 일본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태평양 연안의 영국 자치령, 중국 등에서 일본의 승전을 일본이 서양 세력을 극동에서 배제하려는 첫걸음으로 보는 시각으로 연계되었다. 그 가운데 극단적인 비판론이 ‘황화론’(黃禍論: Yellow Peril, Japanese Peril)으로 전개되었다. 황화론은, 서양의 정신문명을 갖지 않은 아시아인이 근대적인 기술을 도입해 표면적으로 서양화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서양의 우위를 타파하려 한다는 이미지에 근거한 일종의 숙명론이었다. 이러한 논의가 1890년 후반 이후 꽤 일반화되었다(Irie 1993, 56). 황화론은 서양 우월주의가 동양 일본의 대두를 보며 형성된 불안함이 반영된 사회적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이민문제를 두고 형성된 미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대러 승전을 보면서 반일감정, 배일운동으로, 그리고 황화론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였다.

황화론의 대두는 일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서양 우월주의의 정서적 반발이었다(전상숙 2012c, 17-19). 러일전쟁 이후 급속히 확산된 황화론은 일본이 국제적 입지를 대자적으로 자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양의 우월주의, 중심주의를 체험하고 각성하였다. 서양이 동양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차별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자각하였다. 서양과 같이 근대화된다고 해서 서양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곧 그들로부터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이 서양에 대해서 대자적으로 동양을 인식하며 근대 국가 서양에 대한 동양 근대 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정립하는 적극

적인 동인이 되었다(전상숙 2012c, 19).

1890년대 일본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건설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러 견제책으로 나온 이익선론과 불평등조약 개정 등 국력의 관점에서 국가적 발전을 적극화하고 있었다. 일본의 조약개정과 전쟁은 국력의 기초로써 경제력을 충실히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었다(Irie 1993, 35). 제국주의시기 불평등조약 개정이 국권의 확보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두한 황화론은 마루야마가 지정한 바와 같은 일본의 ‘개국’ 곧 근대 일본 국권 확립의 방향을 서양과의 대결적 관점에서 동양주의적 아시아연대로 향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이후 아시아연대론은 근대 국제관계 속에서 근대 일본 국가가 서양 열강과 대등한 국권을 확립하는데 불가피한 정치적 수사이자 실제적인 필요가 되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되었다.

III. 한국의 아시아연대론 수용과 국가 주권 인식

일본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재연한 개국으로 한국은 서양 근대 국제법 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한국의 개국은 서양 열강의 한국 침투를 자국의 국가적 위기로 여긴 일본이 국익의 관점에서 감행한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61년 러시아의 쓰시마(對馬島) 점거를 한국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일본은 먼저 한국을 복속해야 한다는 외교적 명분을 주창하였다. 서양 함포의 위력을 경험했던 일본은 국익의 관점에서 쓰시마점거를 이른바 “조선문제”라 부르며 동아시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책무를 자처하였다. 서양 열강의 반도 한국 진출에 직면한 섬나라 일본의 국가적 대비책을 준비한 것이었다.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선문제’ 해결이라는 일본의 외교적 명분은 정한론으로 연계되었다. 일본이 국가적 위기의식을 ‘조선문제’로 치환하고 그 해결을 자임한 것은 서양 열강에 한국이 중국의

복속국이 아닌 독립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일본이 열강의 일방적인 한국 점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한 ‘조선문제’의 해결은 강화도조약을 통해서 일단락되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문제’를 명분으로 일본이 중화질서의 균열을 야기하며 서양 열강보다 앞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의 확보를 천명한 것이었다(전상숙 2011, 3-5).

아편전쟁으로 동·서양 국제정치의 현실과 국제법을 경험적으로 인식했던 일본은 이른바 ‘조선문제’를 국제정치적 명분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조정하며 제국주의적 국권 확립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반면에 한국은 아편전쟁에 패한 중국에 문안사(問安使)를 보내며 개국의 상황에서도 쇄국을 고수하며 중화질서에 안주하고 있어 국제정세에 색매이었다(이한기 1980, 204). 그 결과, 불가피해진 개국의 국제정치 현실에 직면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모색이 결집되지 못하고 쇄국과 개국으로, 위정척사(爲政斥邪)와 개화(開化)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된 개국의 상황은 한국을 서양 근대의 국제법체제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개국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국제법체제를 알고 근대적 개혁을 통해서 국가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국의 현실은 전근대적인 중화질서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맞물리며 중화질서·중화사상으로부터 탈피하게 하였다. 국제법의 수용을 통해서 국제관계에 춘추전국(春秋戰國) 시기의 균세(均勢) 개념이 활용되며 서양 국가들과의 수교의 불가피성이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당면한 미국과의 수교가 정부의 “備我抗日策”의 일환으로 주체적으로 추진되고, 영국 독일 등 구미 자본주의국가와의 직접적인 문호개방이 이루어졌다(김경태 1975, 201; 김경태 1978, 2; 전상숙 외 2013, 91). 한미조약을 필두로 자주적인 균세정책이 활용되었다. 또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러수호조약, 육로통상조약, 한불조약 등을 체결하며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근대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국은 근대적인 독립 국가로서의 주권을 자주적으로 인식하고 행사하며 근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갔다(김영명 외 2013, 309-311).

이와 같이, 개국의 현실을 인정한 한국은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하며 근대적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국시킨 일본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강화도조약은 서양 근대의 국제법에 의거한 국가의 기본권과 의무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의 자주권과 평등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비록 그 목적은 일본이 전통적인 한·중관계의 단절 곧 중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 인식을 국제적으로 부정하는데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은 한국이 독립국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강화도조약에서 천명된 한국의 독립국이라는 국제정치적 선언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중국이 한국이 자주독립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완결되었다. 이로써 국제정치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전통적인 사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물론 일본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서세동점에 국가적 위기의식을 갖고 근대적 개혁을 모색하던 개화파 지식인들이 일본에 호의를 느끼기게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한국을 강제로 개국시켰지만 대외적으로 한국의 근대적 국권을 선언하며 개혁을 적극 종용한 일본과는 반대로, 중국은 한국이 사대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속국화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였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한국에 파병된 중국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갑신정변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전통적인 사대관계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태도는 근대적 전환기 한국인들의 반중국 민족 감정만 고조시켜 한국사회 전반이 사대의식, 중화사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촉진하였다. 이와 같이 18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중화질서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근대화

에 성공하고 국익의 차원에서 한국을 개국시킨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개국 후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동양 국가로써 술선해서 자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전하며 한국의 근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동점하는 서양 국가들로부터 야기된 국가적 위기로부터 동양 국가들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아시아연대가 주창되며 이를 통한 아시아의 존엄성 수호와 더 나아가 흥아가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근대적 개혁의 필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개국을 강제한 강압적인 국가이기보다 필연적인 개국의 필요를 역설하며 도와줄 선진 지원국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나 위기의식보다 중국을 반식민지화함으로써 동양 국가들의 국권을 위협하는 서양의 국가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무엇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중화사상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자주적 근대화의 국가적 방안이나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개국에 직면해 분열된 정치 상황 속에서 개화파는 개국을 통해서 근대적 정치체제개혁을 이루어 서양 국가들로 인하여 야기된 국권 상실의 국가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을 모색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개국의 현실은 서양 국가들의 근대적 위력에 대응하기 위한 서양식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필요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하였다.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같은 처지의 동질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국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효한 현실적 대안으로써 설득력있게 다가왔다.

1880년 8월 수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자 흥아회 회장(伊達宗城)이 김홍집(金弘集)에게 흥아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하였다. 흥아회의 취지를 듣고 그에 찬성한 김홍집은 일행과 함께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귀국 후 그는 국왕에게 흥아회의 취지가 중국·일본·한국 세 나라가 마음을 같이 해 힘을 합쳐서 유럽인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회의에 중국 공사를 비롯해서 중국인들도 다수 참여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도입 하는 한국 관리들이 흥아회에 참석하였다. 1881년 10

월 도일한 수신사 일행과 1882년 봄 일본을 방문했던 김옥균, 유길준 등이 홍아회 모임에 참석하였다. 당시 방일했던 상당수 사람들은 홍아회의 취지에 매력을 느껴서 회의에 참석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일본에서 홍아회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배경이나 출현해서 한국 관리들에게 참여를 권한 진의를 의문하지 않았던 듯하다. 홍아회원들의 면모나 의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광린 1989, 140-144).

그러한 막연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의식이 조성되는 가운데 다루이의 저서 대동합방론이 널리 읽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메이지유신 성공 이후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아시아의 패권을 다투던 일본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대변한 것으로써 일본 중심의 패권 장악 구상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책은 아시아연대의식의 확산과 같은 맥락에서 회자되고 읽혔다. 수입된 책이 모자라서 등사본이 나와 유포될 정도였다(강제언 1984, 24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영환은 일본에서 이익선론을 주장할 때 역설되었던 이와 입술의 관계와 같은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고종에게 ‘한일제휴’를 상주하였다(김도형 2000, 12). 갑오개혁 이후 출간된 신문에서도 순치보거 관계의 동아시아 삼국연대가 강조되었다(독립신문 1899/05/11; 황성신문 1899/06/13, 1901/07/02).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 개국된 중국·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동양, 그것도 전통적으로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던 일본에 의해서 개국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된 개국의 문제와 일본을 문제시하기보다는, 국권 상실의 위기를 야기하며 개국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곧 동점한 서양 국가들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개국의 상황에 직면해서 서양과 같은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필요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서세동점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식은 아시아연대의 필요가 강조되면서 점증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적 위기의식은 외세배척운동으로 전개

된 중국의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만주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자 더해졌다. 그리하여 러시아가 중국을 점령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황성신문 1900/06/21). 러시아 곧 서양 국가의 남하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었다(황성신문 1900/06/23, 1900/07/10). 러시아로 상징된 서양 국가에 대한 두려움과 대응책을 모색한 내용은 일본에서 주창된 아시아연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화와 관리 수신사 일행의 참석을 필두로 하여 이어진 개화와 관리들과 지식인들의 방일을 통해서 확산된 아시아연대의식 속에서 일본의 북진정책과 대립적이던 남하정책을 추구하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러·일 간의 남진과 북진의 대립은 특히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친일 개화와 관리·지식인들과 친러파 관료들 간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었으므로 아시아연대를 주장하는 친일 지식이나 관리들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나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이 점증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갑오년에 청국을 치고 대만을 독립시켰으며 오늘날까지 정신을 가다듬어 서양 각국을 방어하며 동양을 보존하라”고(독립신문 1899/02/17) 한 선언 국가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한 호감이 커지고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특히 청일전쟁의 결과 중화관념이 크게 흔들리는 한편 갑오개혁으로 추진된 전사회적인 근대적 개혁과 함께 갑신정변의 실패로 몰려났던 개화 세력이 전면적으로 재등장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한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제안으로 대규모 관비일본유학생의 파견도 시작되며 일본유학생 수도 급증할 정도로 전사회적으로 일본의 영향이 급증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의 관비 일본유학생의 파견을 제안한 것이 일정한 목적(친일 관료, 친일파 양성)을 갖고 추진한 것이었음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김영모 1981, 420-424; 이태진 1997, 92; 안용준 1998, 133).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시아연대를 주장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독일 경험에 있거나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아시아연대 논의에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킨 은인이자 동시에 동아시아 삼국의 대러 대응을 추진해야 할 맹주 국가였다(독립신문, 1899/11/09). 아시아연대에 대한 대표적인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독립신문 1898/04/07; 황성신문 1899/05/24, 1899/06/13 참조).

“대한과 일본과 청국은 같은 아시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종자가 같은 종자이고, 신체 모발이 서로 같고, 글을 서로 통용하며 풍속에도 같은 것이 많이 있다. 이 세 나라가 특별히 교제를 친밀히 하여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며 아무쪼록 구라파 학문과 교육을 본받아 어서 속히 동양 삼국이 능히 구라파의 침범을 동심으로 막는다면 동양이 구라파의 속지가 아니 될 터이다.”

아시아연대는 인종과 문물의 차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같은 인종끼리 힘을 합쳐서 서양과 같은 근대화를 추진하여 서양 제국주의의 침투를 막아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세동점에 대응한 아시아의 국권 수호가 핵심이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서양과 대적하기는 역부족이니 동양 삼국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아시아연대 의식에서 동양 삼국은 “동포”, “형제”와 같이 논의되었다(독립신문 1899/11/09). 특히 중국의 의화단사건 이후 “동종동문(同種同文)”과 유교 문화의 동질성에 기초한 아시아 삼국 연대의 주장이 더욱 강해졌다(황성신문 1899/05/24). 동양 삼국이 개별적으로는 어렵지만 연대해서 서로 도우면 서양 국가들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확산되었다(황성신문 1901/11/26).

그러한 아시아연대의 주장은 독립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안경수(安壽)의 ‘일청한동맹론(日淸韓同盟論)’에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안경수 1900). 여기서 아시아연대는 ‘동맹’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동맹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으로 간주되었다. 동양 삼국은 국력과 병력의 차이가 있지만 순치보거와

갈기 때문에 혈맹과 같은 동맹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서양 국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압적인 개국 이후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니라 서양 국가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앞선 것이었다. 상 기 글의 총론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시아연대는 서세동점으로부터 아시아 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삼국동맹은, 국력과 병력이 우월한 일본이 순치보거의 형세 상 불가피하게 맺는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등한 섬나라 일본이 불가피하게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반도 한국과 반 식민지 상태의 중국을 지원하며 동맹을 맺는 것이 아시아연대라는 것이었다. 서양과 같은 근대적 개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위에서 서양적인 근대적 개혁을 위한 지식과 도움을 이질적인 서양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동질적인 동양 국가 일본으로부터 받고 받아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었다. 서양 국가들은 비록 일본보다 선진 근대 국가일지라도 동양 국가들의 국제질서를 교란 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갖게 한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서양 국가들로부터의 동양 각국의 국권 확보를 위한 동맹이 필연적이고 전면적인 것으로 수용되었다. 군사 동맹 차원의 원조는 일본 유학을 통해서 장교를 양성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상업 동맹 차원의 원조는 일본이 조선은행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한국이 일본에 경원 선과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시아연대론의 이해와 수용 방식은 일본의 호의·선의에 의해서 아시아연대가 주창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시아연대론의 주장 속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이 촉진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시아연대론의 군사·상업 동맹은 궁극적으로 삼국 간의 ‘국민적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안 경수 1900).

한마디로 대(對)서양 일본맹주 아시아연대론이었다. 이러한 아시아연대 일본맹주론에 대한 호감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

고 러일전쟁을 도발해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러일전쟁은 부득이한 것으로까지 여겨졌다(황성신문 1903/10/01).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의화단사건에 대하여 러시아가 만주 내 철도 보호를 이유로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 사실상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 것이었다. 러일전쟁은 반도 한국을 통한 만주로의 진출을 노리던 일본이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서양 국가 영국과 동맹을 맺어 대러전쟁을 치를 만한 지원세력을 확보한 후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해 러시아의 남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의 강압적인 공수동맹 체결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러시아가 중국을 점령하면 우리도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러일전쟁이 발발한 것이었다(황성신문 1900/06/21). 아시아연대를 주창하는 일본에 대한 호감과 기대, 그리고 아시아연대론 속에서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과 적대감 속에서 서양 국가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었다. 그리하여 서양 러시아는 반듯이 동아시아로 침투할 것이고, 그 결과 만주를 잃게 되면 중국과 한국이 위협해질 것이므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양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 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역설되었다(황성신문 1903/10/24). 러일전쟁은 개국 이래 지속된 일본의 대(對)서양 인식의 영향 하에서 19세기 이래 격렬해진 경쟁의 결과 역사적으로 전개된 황·백인종 간의 인종전쟁으로 인식되었다(황성신문 1904/05/06). 따라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동양 삼국의 공수동맹이 주장되고 삼국 황제들이 공동으로 러시아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이었다(황성신문 1904/02/22).

그러나 일본은 전세(戰勢)가 유리해지자 1904년 5월 한국의 보호국화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이른바 ‘고문정치’를 단행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1905년 11월 17일 한국과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문제’를 외교적 명분으로 제기하며 한국을 개국시켰던 일본은, 한국이 아닌 만주에서의 문제를 러

시아의 한국 침투와 직결시켜서 “한국 존망”의 위기로 치환하고, 이를 다시 일본 “제국의 안위와 연계”시켜서 “한국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한국을 보호국화한 것이다.

일본이 표방한 개전의 원인은 주권선 일본에 대한 한국 이익선론이었다. 쓰시마사건으로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동진하는 서양에 대한 ‘조선문제’가 정한론, 강화도조약,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통칭 조선문제가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개국’ 곧 근대 일본 국가의 국권 확립을 위한 국제정치적 수사이자 명분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근대 일본 국가의 국권은 그러한 국제정치적 수사와 함께 일본이 서양의 황화론을 극복하고 삼국간섭과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명실공히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써 인정받게 될 때 확립될 것이었다. 한국의 보호국화는 일본이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석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익선론과 아시아연대론을 동전의 양면으로 한 일본의 대한정책의 본질 곧 아시아연대론의 실상이 드러났다.

한국인들이 아시아연대론에 공감했던 것은 “日人이 韓人을 대하면 언필칭 文明을 개도한다하며 獨立을 부식한다하며 동양에 平和를 유지한다하고”했기 때문이었다. 국제정치의 현실에 문외한이었던 한국인들은 아시아 연대의 수사를 끝이곧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때문에 보호국화 이전 대러 전쟁에도 협조적일 수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5/11/22). 그러나 보호조약의 체결은 한국과 한국인의 국권과 주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연대가 아니라 분열을 빚는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황성신문 1905/11/20). 한국이 힘은 약하지만 이천만 한국인 모두 일본에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 모두를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니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05/11/22). 결국 “동양의 평화는 어찌 유지될 것인가 ... 일본의 실책으로 인하여 동양의 화근이 조성되었으니 그 책임과 걱정이 크다”고 하기에 이르렀다(대한매일신보 1906/06/14). 서양이 아닌

동양 국가 일본이 연대를 외쳤던 같은 동양의 국가를 침탈하니 더욱 암담해진 국가의 진로가 개탄된 것이었다.

일본과 아시아연대에 대한 비판은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등 국권 침탈이 가속화될수록 고조되었다. 결국 서양과의 대항적 관점에서 아시아연대를 통해서 논의되던 동양주의가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1909년 8월, 아시아연대를 뜻하는 동양주의란 “동양이 주가 되고 국가가 객이 되어 국가의 흥망은 개의치 않고 오직 동양을 지킨다 하니 우매하기 그지없다”고 비판되었다. 아시아연대, 동양을 논하면서 개별 국가의 국권이 생략되었던 사실이 현실에 직면해서야 자각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한 자각은, “한국이 영구히 망하고 한족이 영원히 멸망해도 오직 그 국토가 황인종에게만 있으면 이를 낙관해야 하는가. 아니다 불가하다”는(대한매일신보 1909/08/08, 1909/08/10) 국제정치적인 독립 곧 국권 인식으로 전개되었다. 서양 백인에 대한 동양 황인, 그에 대한 아시아연대와 동양의 수호가 각 국가의 영토 주권 곧 대외적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대자적인 인식이 각성되었다. ‘조선문제’와 ‘한국의 독립’을 표방한 일본의 침략 의도가 현재화되어 서야 한국인 대부분이 아시아연대의 기만성과 국권의 의미를 분명하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을사조약이라는 망국적 사태에 직면하면서도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자각하지 못하고(김도형 2000, 26) 아시아연대를 통해서 서세동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다. 서양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서양의 침투에 대한 위기의식은 개국을 강제한 일본의 힘과 그 저력을 형성한 메이지유신을 동양도 지주적인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표본과 같이 형상화해 받아들이게 하였다. 서양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은 일본이 비록 강제로 개국케 했지만 강화도조약을 통해서 대외에 한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근대적 개혁을 촉구한 우호국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한 일본을 통해서 한국은 국제법의 현실을 배우고 일본의 근대화를 배웠다. 그들 중 유길준·유정수·윤치호는 동경에서

학교에 입학해 최초의 한인 일본유학생이 되었다(정옥자 1965, 105-142; 김영모 1981, 418-419; 이광린 1986, 40-63).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일본 유학생 수도 증가하였다(이광린 1986, 63). 관비 일본유학생의 파견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새로운 한국 체제 확립의 사명을 띠고 부임한 주한공사 이노우에(井上馨)가 제안해 이루어졌다. 학부대신 이완용과 경응의숙(慶應義塾)의 후쿠자와(福澤諭吉)가 합의하여 1895년 7월 한국 정부는 최초의 관비 유학생 182명, 1897년에는 제2차 관비유학생 64명을 파견하였다. 이들 일본유학생들은 선진 일본의 근대적 문물에 압도되어 그것을 배우고 습득해 돌아와 한국의 초기 근대화와 대외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전상숙 2012a).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아시아연대를 접한 한국인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홍아회와 일본인들의 진의를 의문시하고 탐색하기보다는 당면한 서양에 대한 국권 수호와 근대적 개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주요 적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대항책으로 나온 합방과 합종을 제안한 다루이의 도서가 널리 읽히고 아시아연대론이 확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다루이의 대동합방론 초판본은 연대사상으로도 볼 수 있고 침략사상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또한 자유민권주의자인 다루이가 독립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등한 합방을 주장한 것은, 실제로는 일본의 한국 침략을 긍정하고 일본의 한국 '병합(併合)'을 위한 관념적 무기로 이용된 것이었다. 아시아연대는 백인의 침략으로부터 황인의 아시아를 수호함으로써 일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때 독립국 한국과 일본의 대등한 합방은 곧 강화도조약을 통해서 선포된 독립국 한국이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끊고 일본과 근대적인 국교를 수립하고 친교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예속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그것은 친교로 긍정하는 모순된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강대국인데 반하여 한국은 비교가 안되는 열등국이므로 양국의 합방은 한국에게 최대의 이익, 은혜가 된다는 편견이 깔려 있었다. 다루이의 대동합방론은 당시 일본이 안고 있던

국가적 모순이 반영된 것이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시아의 맹주적 지위를 차지하자 소위 아시아연대론 명분으로 대륙침략에 알맞은 관념적 무기가 된 것이었다(김운태 1986, 202).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서양 근대 문물의 수용, 일본이 수용한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된 세계관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대일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전상숙 2012a). 한국인들이 그러한 원천적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근대 국권 의식을 자각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댓가를 지불해야 했다.

IV. 맺음말: 아시아연대론에 나타난 한·일 국권 인식의 차이

서양과의 조우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동아시아 삼국 지배층의 대응자세는 유사했다. “쇄국의 마음을 가지고 개국의 정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표면적인 과정의 일부였을 뿐 국가적 결합의 차이는 컸다. 그 차이는 중국이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가 된 데 반하여 일본이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전복시키고 동양의 맹주를 자처하고, 한국은 그 식민지화 되게 하였다.

중국의 아편전쟁 패배는 일본이 근대적인 국가 주권 확립을 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서양과 현실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은 근대적으로 무장한 미국의 함선에 스스로 문호를 개방하며 그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을 국가적 개혁을 꾀하였다. 그것은 서양과 같은 근대 문명국이 되는 동시에 서양과 필적하는 동양의 문명국이 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서양 열강이 제국주의적 패권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한 국제법체제와 사회진화론 등 서양 문물을 실리적으로 수용, 재편하며 동양의 패권국이 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섬나라의 고질

적인 과잉 인구와 부족한 자원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러한 일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가능한 방법은 인접한 반도 한국에서 찾아졌다.

근대 일본의 국가적 성장의 목적은 후쿠자와가 적시한 일본의 개국을 완성하는 것이자 서양 열강과 동등한 근대적 국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서양의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주체성의 문제로 제기된 사상과제를 해결하려는 사상의 ‘응용’ 및 ‘실천’과 결합되었다. 그리하여 막말의 부국강병론으로부터 외압에 대항하는 보다 강력한 통일국가를 창출하는 국권론으로 귀결되었다. 근대 일본의 기원으로 불리는 메이지유신은 대내적인 최고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일본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과 평등성을 확보함으로써 완수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서양 열강과 대등한 근대 일본 국가의 국권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서세동점을 목도하며 근대적 국권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근대적 국권을 확립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메이지정부의 국권론을 한편으로 하고 일본 사회에서 제기된 탈아론으로부터 흥아, 아시아연대론을 한편으로 하는 것이었다. 양자는 모두 서양 열강의 근대 국가와 필적하는 근대 일본 국가의 주권 확립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진화론과 인종론에 입각한 아시아연대론은 궁극적으로 황인종 일본의 국권 확립을 위한 패권의 논리이자 세계전략 구상이었다.

한국에서도 서양 열강의 동진에 직면하여 벌인 두 차례의 양요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의식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아편전쟁 패배를 보면서도 일본처럼 서양과 같은 힘의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적 독립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김영명 외 2013, 303-329). 오히려 문호를 단단히 단속함으로써 국가적 독립과 주권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제화의 국제정치적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국 전통적인 국가주권의 수호를 고수하려는 노력은 자국의 경험을 재현한 일본에 의해서 깨지고 서양 근대 체제에 편입되었다. 한국의 문호를 연 것은 서양이

아닌 동양 국가였다. 서양적 근대화를 시작한 후발 동양 국가이자 선진 동양 근대 국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양 근대화의 위력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자주적 근대화의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며 근대적인 국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국제정치적 격변의 맥락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중화질서 속에 안주하고 있던 한국은 개국의 상황에 직면해서야 개국을 놓고 국론이 양분되고 말았다. 결국 현실이 된 개국의 상황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 근대적인 일본 국가의 국권 확립을 꾀하는 일본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한 일본에 의한 개국은 동진한 서양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제국주의적 확장을 추구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병합’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한국 개국은 서양 열강과 같은 근대 국가 일본의 주권 확립이라는 장기적인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단지 경제적인 이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해가고자 하였다. 개국 직후부터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촉구하며 수신사를 권하고, 관비유학생의 파견을 제안해 관철시킨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개국의 상황에서 그러한 일본의 행위는 개화의 필연성을 절감한 개화와 한국인들에게 강압적으로 개국시킨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나 위기의식을 사상시키며 일본을 근대적 개혁의 지원자이자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아시아연대론의 수용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국의 상황은 아시아연대에 공감하는 개화와 지식인들이 일본보다 전통적인 동양 국가들의 체제 변혁을 야기한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앞서게 하였다. 개국 이후 국권의 수호를 위해서는 서양과 같은 근대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이견이 없게 되었지만 그 개혁의 방안이 서양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국시키고 근대화를 촉구하는 일본의 협조를 받는 데서 찾아졌다. 비록 일본은 강제로 문호를 열게 했

지만 강화도조약에서 국제법에 의거해서 한국이 독립국임을 대외에 선언하고 일본과 같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일본이 주창한 아시아연대는 동양의 국가적 위기를 야기한 이질적인 서양에 대한 이타감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인근 국가가 동양 국가의 보존을 위하여 단결해야 할 필요를 주창하며 지원을 약속하는 것과 같았다.

일본의 맹주를 주창하는 아시아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국가적 독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19세기말 20세기 초 개국의 국제정치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강화도조약 이후 한국은 국제법 학습을 통해서 군세와 국가 주권 등을 경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지만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근대 문물의 수용 속에 내포된 일본인의 세계관과 근대적 패권의 논리를 의문시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양에 의해서 야기된 동양의 국가적 위기의식 속에서 사회진화론을 일본식으로 변형한 아시아주의의 동양주의를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국권 침탈이 현재화되어서야 일본과 아시아연대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근대적인 국권에 대한 인식이 각성되기 시작하였다. 백인에 대한 황인종, 서양에 대한 동양인의 연대와 아시아의 수호도 각 국가가 주체가 되는 국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화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본에 대한 독립, 일본에 대한 국권의 확립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자주적 근대화를 통해서 열강과 같은 근대 국가로서의 주권을 확립하고자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적이 국권 인식은 모두 서세동점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서세동점으로 야기된 전통적인 국제관계의 균열을 이용하며 서양과의 대자적인 관계 속에서 근대적 국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전통적인 국제관계가 균열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쇄국의 인식 속

에서 국가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 국 모두 국가적 위기를 야기한 서세동점의 원동력인 서양 근대 문물의 수용을 통해서 힘을 기르지 않고서는 국가적인 독립도 근대적인 국권의 확립도 어렵다는 것은 공히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그것은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할 대륙침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할거되어있던 국가체제를 통일하고 단일한 지배체제를 정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개국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정치 인식이 부족했던 한국은 개국의 상황에서 개화와 척사로 양분되어 근대적 개국에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에 의한 개국은 일본의 지원을 통해서 국가체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고 일본과 같은 근대 국가가 되는 방식을 택한 개화파와 기존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수구파로 정국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치적 분화는 러·일 대립과 결부되어 친러·친일의 대결구조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국가적 성장과 직결되어 한국의 개국을 추진한 일본은 개화파들의 근대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루며 한반도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갔다. 그리하여 일본의 아시아연대를 접한 개화파 지식인들은 아시아연대에 내재된 침략적인 정책적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서양 국제화시기의 이상적인 국권 수호의 방안으로 받아들였다. 아시아연대에 대한 이상과 희망은 비단 개화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연대는 서세동점으로 인한 국제적인 근대화의 변혁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로부터 국가 곧 국권을 보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와 같이 양 국의 개국과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은 일본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던 반면에 한국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서양 근대 국가와 그 힘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며 그에 필적하는 국가 주권을 확보하고자 한 국권 인식과, 간접적으로 서양 근대 국가와

그 힘을 인식하고 선협자의 지원을 통해서 국가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았다. 전자가 서양 근대에 대한 대자적인 인식 속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근대 동양 국가의 주권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서양 근대에 대한 즉자적인 인식 속에서 간접적으로 종전과 같은 국가 주권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써 근대적인 국권 인식이 현실적으로 자각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실질적으로 국권이 상실되어서야 아시아연대의 기만성 곧 국제법체제의 국가의 기본권과 평등권이 영토 주권 곧 대외적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근대적 국가 성장과 직결해 한국을 개국시키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간 일본의 역할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서세동점의 현실을 대외적으로 둘러보고 직시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국제적인 근대적 격변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태도를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국권 상실의 현실 속에서 항일 독립의 저항적 민족의식과 근대적인 국권 인식을 대자적으로 자각해 가면서 근대 국가의 주권 확립을 위한 국가적 독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투 고 일 : 2014년06월25일]

[심사완료일 : 2014년08월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08월20일]

참고문헌

- 독립신문 (Dongnip Sinmun). 1898. “논설.” (Nonseol) 『독립신문』 (Dongnip Sinmun) (4월 7일).
- _____. 1899. “各國度略.” (Gakguk Doryak) 『독립신문』 (Dongnip Sinmun) (2월 17일).
- _____. 1899. “東洋의 風雲.” (Dongyang-eui Pungun) 『독립신문』 (Dongnip Sinmun) (11월 9일).
- _____. 1899. “西風政及.” (Seopungjeonggeup) 『독립신문』 (Dongnip Sinmun) (5월 11일).
- 대한매일신보 (Daehan Maeil Sinbo). 1905. “危哉韓日關係.” (Wijaehanilgwangye) 『대한매일신보』 (Daehan Maeil Sinbo) (11월 22일).
- _____. 1906 “小貪大失.” (Sotamdaesil) 『대한매일신보』 (Daehan Maeil Sinbo) (6월 14일).
- _____. 1909. “東洋主義에 대한 批判.” (Dongyangjuui-e Daehan Bipan) 『대한매일신보』 (Daehan Maeil Sinbo) (8월 8일, 10일).
-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1899. “논설.” (Nonseol)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5월 24일).
- _____. 1899. “논설.” (Nonseol)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6월 13일).
- _____. 1900. “團匪暴舉恐爲東洋三國.” (Danbipokgeogongui dongyangsanguk)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6월 21일).
- _____. 1900. “答疎齋先生書.” (Dapsojeseonsangseo)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6월 23일).
- _____. 1900. “客問誠慨然.” (Gaekmunseonggaeyeon)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7월 10일).
- _____. 1901. “答書簡.” (Dapseogan) 『황성신문』 (Hwang

- seong Sinmun) (7월 2일).
- _____. 白足生 (Baek, Jok-sang). 1901. “寄書.” (Giseo)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11월 26일).
- _____. 1903. “日不得不不戰.” (Ilbuldeukbulbuljeon)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10월 1일).
- _____. 1903. “논설.” (Nonseol)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10월 24일).
- _____. 1904. “別報 正三品慶光國氏上政府書.” (Byeolbo Jeon gsampumkyunggwangguksisangjeongbus)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2월 22일).
- _____. 1904. “亞襄先生問答.” (Ayangseonsangmundap)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5월 6일).
- _____. 張志淵 (Jang, Ji-yeon). 1905. “是日也放聲大哭.” (Siilyayangseongdaegok)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11월 20일).
- 抱宇生 (Po, Woo-sang). 1908. “競爭의 根本.” (Gyungjaeng-ui Guenbon) 『태극학보』 (Taeguk Hakbo) 22.
- 안경수 (An, Kyung-su). 1900. “日清韓同盟論.” (Ilcheonghandongmaengron) 『日本人』 (Ilbonin) 116-123.
- 강재언 (Gang, Jae-un). 1984. “아시아주의와 일진회.” (Asiajuui-wa Iljinhoe) 『한국사회연구』 (Hanguk Sahoe Yeongu) 2: 229-253.
- 김경일 (Kim, Kyung-il). 2005. “범아시아주의의 ‘다자성’과 동북아시아 지역다자협력.” (Bum Asiajuui-ui ‘Dajaseong’-gwa Dongbuk Asia Jiyeok Daja Hyupryuk) 『한국동북아논총』 (Hanguk Dongbuka Nonchong) 10(4): 5-29.
- _____. 2011.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Jeguk-ui Sidae-wa Dong Asia Yeondae). 파주(Paju): 창작과비평사(Changiak-gwa Bipyoungsa) 1-430.
- 김경태 (Kim, Kyung-tae). 1975. “불평등조약 개정교섭의 전개: 1880년대 전후의 대일 ‘민

- 족문제’.”(Bulpyungdung Joyak-ui Gaejeong Gyoseop-ui Jeongae: 1880 Nyeondae Jeonhu-ui Daeil ‘Minjok Munje) 『한국사연구』(Hanguksa Yeongu) 11: 165-204.
- _____. 1978. “한국근대교육 형성의 사상사적 배경.”(Hanguk Guendae Kyoyuk Hyungseong-ui Sasangsa-jeok Baekyung) 『이화사학연구』(Ewha Sahak Yeongu) 10: 1-9.
- 김도형 (Kim, Do-hyung). 1986. “한말 애국운동의 정치론 연구.”(Hanmal Aeguk Undong-ui Jeonchiron Yeongu) 『한국사연구』(Hanguksa Yeongu) 54: 75-137.
- _____. 1991. “일제침략기(1905~1919) 친일세력의 정치론 연구.”(Ilje Chimryak Gi(1905~1919) Chinil Seryuk-ui Jeonchiron Yeongu) 『계명사학』(Gyemyung Sahak) 3: 1-63.
- _____. 2000.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인층의 ‘삼국제휴론’: ‘인종론적 제휴론’을 중심으로.”(Daehan Jeguk Gi Gyemongjuui Gyeyeol Jisikincheung-ui ‘sangukjehuron’: ‘Injongron-jeok jehuron’-ul jungsimuro) 『한국근현대사연구』(Hanguk Geunhyundaesa Yeongu) 13: 7-33.
- 김영명 · 전상숙 (Kim, Yong-myung, Jeon, Sang-sook). 2013. “전통적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근대 ‘민족’인식의 형성: 민족 개념 형성의 계기들.”(Jeontong-jeok Gongdongche Uisik-ui Byunhwa-wa Guendae ‘Minjok’ Insik-ui Hyungseon) 『사회이론』(Sahoe Iron) 43: 303-329.
- 김영모 (Kim, Yung-mo). 1981. 『조선지배층연구』(Joseon Jibae-cheung Yeongu) 서울(Seoul): 일조각(Iljogak).
- 김운태 (Kim, Un-tae). 1986.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Ilbon Jegukjuui-ui Hanguk Tongchi) 서울(Seoul): 박영사(Bakyungsa).
- 박상섭 (Park, Sang-seop). 2004. “근대 주권 개념의 발전과정.”(Geundae Jugweon Gaenyum-ui Baljeon Gwajeon). 『세계정치』(Segye Jeongchi) 25(1): 95-122.
- 백동현 (Baek, Dong-hyun). 2001.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Daehan Jeguk Gi Eonron-e Natanan Dongyangjuui Ronri-wa gu Geukbok) 『한

- 국사상사학』(Hanguk Sasangsahak) 17: 513-551.
- 스벤사아러 (Saaler, Sven). 2008. “국제관계의 변용과 내셔널 아이덴티티 형성.”(Gukje Gwangye-ui Byeonyong-gwa National Identity Hyungseong) 『한국문화』(Hanguk Munhwa) 41: 135-157.
- 요시자와 세이이치로 (Yoshizawa Seichiro). 2006. 정지호 (Jeon, Ji-ho) 옮김(trans). 『애국 주의의 형성』(Aegukjuui-ui Hyungseon). 서울(Seoul): 논형(Nonhyung) 1-296.
- 이광린 (Lee, Gwang-rin). 1986. 『한국개화사의 제문제』(Hanguk Gaehwasa-ui Jemunje). 서울(Seoul): 일조각(Iljogak).
- _____. 1989.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Gaehwapa-wa Gaehwasasang Yeongu). 서울(Seoul): 일조각(Iljogak).
- 이리에 아키라 (Irie, Akira). 1993. 이성환 (Lee, Seong-hwan) 옮김(trans). 『일본의 외교』(Ilbon-ui Oegyo). 서울(Seoul): 푸른산(Purunsan).
- 이한기 (Lee, Han-gi). 1980. “한국 및 일본의 개국과 국제법.”(Hanguk mik Ilbon-ui Gaeguk-gwa Gukjebeop)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Haksulwon Nonmunjip Inmunsahoe Gwhahak Pyeon) 19: 180-200.
- 전복희 (Jeon, Bok-hee).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Sahoejinhwaron-gwa Gukgasasang: Guhanmal-ul Jungsimuro). 서울(Seoul): 한울(Hanul).
- 전상숙 (Jeon, Sang-sook). 2010. “국권상실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 (Gukgwon Sangsil-gwa Ilbon-ui Hanbando Jeongchaek) 『동아연구』(Donga Yeongu) 59: 5-41.
- _____. 2011. “한국 식민지시기 전후의 연속성 속에서 본 한·일 독도 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Hanguk Sikminji Sigi Jeonhu-ui Yeonsokseong sokeseo Bon Hanil Dokdo Munje-ui Yeoksaseong-gwa Jeongchijeok Hamui) 『영토해양연구』(Yeongto Haeyang Yeongu) 1: 90-115.
- _____. 2012a. “한말 신문·잡지 언설을 통해 본 근대 서양 ‘사회과학’ 수용의 역사정치적 성격: 한국 초기 ‘사회과학’형성의 문제의식과 특성.”(Hanmal Sinmun japji Eonsol-ul Tonghae Bon Geundae Seoyang ‘Sahoegwahak’ Suyong-ui Yeoksa Jeongchijeok Seonggyuk). 『담론 201』(Damron 201) 15(2): 45-80.

- _____. 2012b. “근대 ‘사회과학’의 동아시아 수용과 메이지 일본 ‘사회과학’의 특징: 블룬칠리 국가학 수용을 중심으로.” (Geundae ‘Sahoegwahak’-ui DongAsia Suyong-gwa Meiji Ilbon ‘Sahoegwahak’-ui Teukjil: Bluntchili Gukgahak Suyong-ul Jungsimuiro) 『이화사학연구』(Ewha Sahak Yeongu) 44: 181-220.
- _____. 2012c. 『조선총독정치연구: 조선총독의 ‘상대적 자율성’과 일본의 한국지배정책 특징』 (Joseon Chongdok Jeongchi Yeongu: Joseon Chongdok-ui ‘Sangdaejeok Jayulsong’ gwa Ilbon-ui Hanguk Jibae Jeongchaek Teukjil). 파주 (Paju): 지식산업사(Jisik Sanupsa).
- _____. 2013. “근대 전환기 한국 ‘사회과학’수용의 특징과 유산: 근대 국가 지향과 일본을 통한 간접 수용.” (Geundae Jeonhwan Gi Hanguk ‘Sahoegwahak’ Suyong-ui Teukjing-gwa Yusan: Geundae Gukga Jihyang-gwa Ilbon-ul Tonghan Ganjeop Suyong) 『아시아연구』(Asia Yeongu) 16(2):125-154.
- 전상숙 · 노상균 (Jeon, Sang-sook, Noh, Sang-gyun). 2013. “병합 이전 한국 정부의 근대적 교육체제 개혁과 관학.” (Byunghap Ijeon Hanguk Jeongbu-ui Geundaejeok Gyoyuk Cheje Gaehyuk-gwa Gwanhak) 『동양정치사상사』(Dongyang Jeonchi Sasangsa) 12(1): 87-112.
- 정옥자 (Jeon, Ok-ja). 1965. “紳士遊覽團考.” (Sinsa Yuramdan Go) 『역사학보』(Yeoksa Hakbo) 27: 105-142.
- 조재곤 (Jo, Jae-gon). 2000. “한말 조선 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후 인식과 논리.” (Hanmal Joseon Jisikin-ui Dongasia Samguk Jehu Insik-gwa Nonri) 『역사와현실』 (Yeoksa-wa Hyunsil) 37: 149-174.
- 하영선 (Ha, Yung-son). 2009. “근대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Geundae Hanguk-ui Pyunghwa Gaenyum Doipsa). 하영선 외 (Ha, Yung-son) Oe.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Geundae Hanguk Sahoegwahak Gaenyum Hyungseongsa). pp. 207-248. 파주(Paju): 창작과비평(Changjak-gwa Bipyeong).
- 한상일 (Han, Sang-il). 2002. 『아시아연대와 일본제국주의』(Asia Yeondae-wa Ilbon Jegukjuji). 서울(Seoul): 오름(Orum).

- 渡邊 浩 (Watanabe, Hiroshi).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Higashi Asia no Ougen to Shisou). 東京(Tokyo): 東京大學出版會(Tokyo Daigaku Shutpanhoe).
- 東亞文化研究所 (TouA Bunga Genkyujo). 1988. 『東亞同文會史』(Toua Doubungai). 東京(Tokyo): 雲山會(Unzankai).
- 武藤秀太郎 (Mutou, Shutarou). 2009. 『近代日本の社會科學と東アジア』(Kindai Nihon no Shagaigaku to Higashi Asia). 東京(Tokyo): 藤原書店(Hujiwara Shoten).
- 山口光譯 (Yamaguchi Koyaku). 1962. 『大君の都 下』(Daigun no Miyako). 東京(Tokyo): 岩波文庫(Iwanami Bungo).
- 山縣有朋 (Yamagata, Aritomo). 1890. “外交政策論.”(Gaigyo Seisaku Ron) 大山梓 編 (Ouyamasai) eds. 1966. 『山縣有朋意見書』(Yamagata Aritomo Ikensho). pp. 196-201 東京(Tokyo): 原書房(Genshobou).
- 山縣有朋 (Yamagata, Aritomo). 1890. “帝國の國是に就ての演説.”(Teikoku no Kokusi ni twuiteno Ensetsu). 大山梓 編 (Ouyamasai) eds. 1966. 『山縣有朋意見書』(Yamagata Aritomo Ikensho). pp. 204-207. 東京(Tokyo): 原書房(Genshobou).
- 松本三之介 (Matsumoto, Sannosuke). 1969. 『天皇制國家と政治思想』(Tennousei Kokka to Seiji Siso). 東京(Tokyo): 未來社(Miraisha).
- 水野直樹 (Mizuno, Naoki). 1996. 類年代日本・朝鮮・中國におけるアジア認識の一断面-アジア民族會議をめぐる三國の論調.”(1920nendai Nihon Chosen Chugoku niokeru Asia Inshiki no ittanmen-Asia Minjok Kaigi O meguru Sangoku no Ronjo) 古屋哲夫 (Huruya, Tetsuo) ed..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Kindai Ninon no Asia Insiki). pp. 353-370. 東京(Tokyo): 綠陰書房(Ryokuin Shobou).
- 矢澤康祐 (Yazawa, Yasusuke). 1960. “明治前半期ブルジョア民族主義の二個の發現形態: アジア連帶意識をめぐる.”(Meji Zenhanki Bourgeois Minjokshugi no Niko no Hataugen Kentai: Asia Rentai Isiki Omegutte). 『歴史學研究』(Rekisigaku Kenkyu) 238: 1-26.
- 安國昭男 (Yasukuni, Akio). 1998. 『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Meiji Zenki Tairiku SeisakuSi no Kenkyu). 東京(Tokyo): 法政大學出版局(Hosei Daigaku

Shutpanyoku).

野原四郎 (Nohara, Siro). 1959-1962. “大アジア主義”(Tai Asia Shugi) 『アジア歴史辞典』
(Asia Rekisi Jiten), pp. 222-223. 東京(Tokyo): 平凡社(Heibonsha).

一又正雄 (Hido, Masao). 1973. “日本の國際法を築いた人びと.”(Nihon no kokusaihou o
Tuita Hidobido) 『國際問題新書』(Kokusai Mondai Sinsho) 37: 22-37.

井上勳 (Inoue, Isao). 1980. “‘開國’と近代國家の成立.”(Kaikoku to Kindai Kokka no
Seiritwu) 『近代日本思想史』(Kindai Nihon Sisousi), pp. 11-45. 東京(Tokyo): 有斐
閣雙書(Yuarikakusousho).

樽井藤吉 (Tarui, Togichi). 1983. 『大東合邦論』(Daidou Gatpou Ron). 東京(Tokyo): 築摩書
房(Chikuma Shobo).

酒田正敏 (Sakata, Masatosi). 1978.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Kindai
Nihonniokeru Taigaikata Undou no Kenkyu). 東京(Tokyo): 東京大學出版會
(Tokyo Daigaku Shutpankai).

竹内好 編纂・解説 (Takeuchi, Yosimi). 1963. 『アジア主義』(Asia Shugi). 東京(Tokyo): 筑
摩書房(Chikuma Shobo).

中塚 明 (Nakazu, Akira). 1993. 『近代日本の朝鮮認識』(Kindai Nihon no Choseon Insiki).
東京(Tokyo): 研文出版(Kenmun Shutpan).

沖田行司 (Okita, Gyouji). 2007. 『日本近代教育の思想史研究-國際化の思想系譜-』(Nihon
Kindai Kyouiku no Sisousi Kenkyu-Kokusaika no Sisou Keihu). 東京(Tokyo): 東
京學術出版會(Tokyo Daigaku Shutpankai).

丸山眞男 (Maruyama, Masao). 1961. 『日本の思想』(Nihon no Sisou). 東京(Tokyo): 岩派書
店(Iwanami Shoten).

ABSTRACT

Korean Intellectuals' Cognitive Response to Japanese 'Asian Solidarity': Focused on Recognitions of State Sovereignty at Modern Transformational Period

JEON Sang-sook

After opening the Korean door, Japan began to secure Japanese national interest. It aimed to expand to North continent via Korean peninsula to complement Japan as an island nation. In this process, Japan presented 'Asian Solidarity' concept. It meant Asia by Asians against imperialist Western penetration. Asian states' solidarity to keep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was emphasized. Even though it was an international political rhetoric to complement Japanese power against Western powers, Koreans accepted it and believed that Korean independence could be kept by Asian solidarity with Japanese support. Koreans recognized national sovereignty encountered with Western powers and began to distance itself from China. However, Koreans did not recognize national sovereignty and power in relative relationship to other powers as Japan did. The stark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recognition of national sovereignty resulted in the two nations being a colonial state and an imperial state, respectively. Therefore, Koreans had to take first national independence recognizing the very meaning of national sovereignty against imperial annexation.

Keywords Aian Solidarity, Dongadongmunhoe, National Sovereignty,
Heungahoe, Kim Hong-jip, Susinsa